

#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

2018. 1.

금 융 위 원 회

# 목 차
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기본방향 .....	3
III. 세부 추진과제 .....	4
1. 평가의 정확성 제고 .....	4
2. 평가의 공정성 제고 .....	8
3. 평가의 투명성 · 책임성 강화 .....	10
4.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.....	13
IV.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추진 방향 .....	14
V. 추진일정 .....	15

## I. 추진 배경

□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금융회사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기초

○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전 국민의 경제·금융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

\* 현재 개인신용평가를 수행하는 CB사(NICE평가정보, KCB)는 약 4,515만 개인의 신용등급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제공

### ※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요

- “개인신용평가”란 개인이 경제적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,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
- 개인신용평가는 신용조회사\*(CB: Credit Bureau) 평가 및 금융회사 자체 평가로 구분 \* 현재 3개사 영업중 (NICE, KCB, SCI평가정보)
  - CB사 : 신용정보원·금융회사 등에서 모든 국민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의 신용위험도를 평가, 등급화하여 금융기관에 제공
  - 개별 금융회사 : 거래 고객에 대하여 CB사의 평가와 더불어 자체적인 신용평가(CSS, Credit Scoring System)의 결과를 종합하여 여신심사에 활용

□ 우리의 개인신용평가는 '03년 카드사태, 신용불량자 급증 등에 대응하여 본격 도입된 이후 빠르게 성장

○ 신용정보 인프라가 강화되고, 개인 CB업\*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신용정보에 기초한 전문화된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마련

\* '02.9월 한신정·한신평정(現NICE 평가정보)에서 개인 CB업무를 시작  
'05년 국내 8개 금융사 연합으로 KCB 설립

□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, 장기·분할상환 여신관행 정착 등 여신구조도 건전화

○ 또한, 신용이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채무자인 개인의 건전한 신용생활 및 신용관리를 유도(Disciplinary effect)

□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, 아직까지 국민 경제·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은 부족하다는 평가

○ 독과점 구조하에서 CB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흡하여 제도적인 책임성 확보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

□ 이에 따라 불합리한 평가관행이 지속되면서 평가의 투명성·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

① 이용업권에 따른 일괄 평가, 일률적인 등급제 등으로 차주별로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

⇒ 불합리한 차별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차주별 위험 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·제공 등도 지연

②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금융권 정보 중심의 평가를 지속

⇒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한 청년, 주부, 고령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(Thin Filer)에 대한 평가상 불이익 발생

③ 특히,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금융권 연체(이력)정보를 과도하게 활용중

⇒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및 금융·경제생활에 과도한 제약

④ 평가지표 등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, 평가 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의 보장도 미흡

⇒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가 어렵고, CB사 자의적 평가 우려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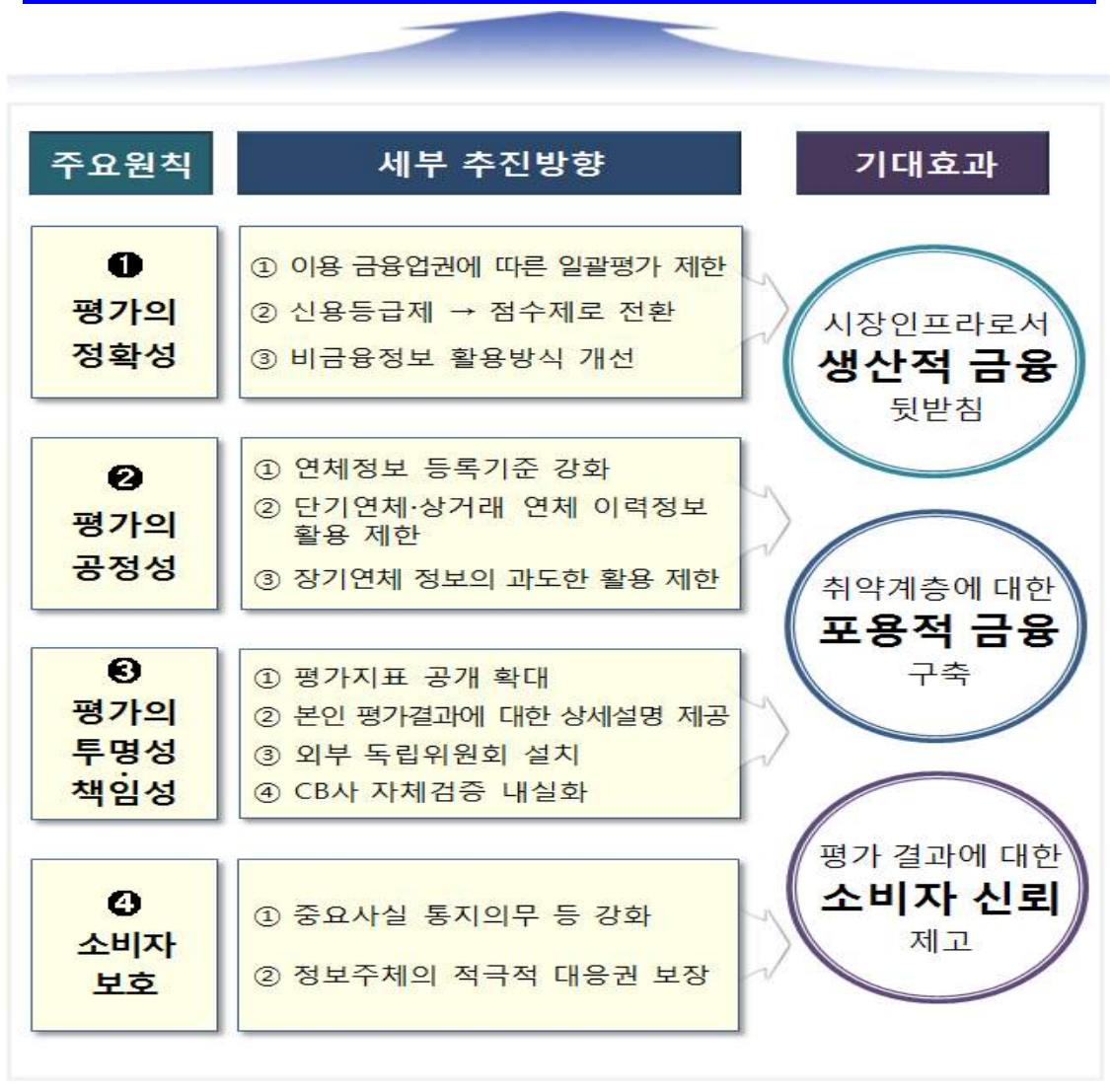
➡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, 평가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

※ 그간 금감원·CB사·협회·학계·금융研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방안 검토

## II. 기본 방향

- ① 정확한 신용판단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 
상환의지·능력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는 **생산적 금융**을 뒷받침
- ② 위험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통해 금융소외  
계층의 저신용 골레를 막는 **포용적 금융** 구현
-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③ 투명성·책임성을 강화하고 ④ 정보  
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**소비자 신뢰**를 제고

### 공정한 개인신용평가를 통한 책임있는 여신관행 정착



### Ⅲ. 세부 추진과제

#### 【1】평가의 정확성 제고

◆ **확일적 기준에 따른 일괄평가를 지양하여 리스크 평가를 정밀화하고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균형있게 활용**

#### 1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 완화

□ **(현황)**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수준 및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차주의 신용점수가 하락

○ 하락폭은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이며,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

< 업권별 대출발생시 등급하락폭 >

구분	은행	상호금융	보험	캐피탈카드	저축은행	대부업
대출전(a)	2.48	2.43	2.33	2.65	3.90	5.66
대출후(b)	2.73	2.97	3.19	3.54	5.50	6.82
등급변동(b-a)	<b>0.25</b>	<b>0.54</b>	<b>0.86</b>	<b>0.88</b>	<b>1.61</b>	<b>1.16</b>

\* 나이스평가정보('17.3월중 신규대출자(기대출 미보유자) 기준)

□ 이에 대해, 동일업권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 위험은 다양\*한데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 제기

\* (예) 카드사의 6%미만 저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확률은 은행 고객 평균수준

○ 특히, 중도금 대출·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\*에도 업권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음

\* (예)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연체확률은 0.3%로 은행권과 유사  
유가증권 담보대출의 경우 전 업권의 연체확률이 2~3% 수준으로 유사

□ (개선) “이용업권” 외에 “대출금리” 및 “대출유형”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여 평가토록 CB사 평가체계 개선

①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“대출금리”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

-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

○ 다만,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\*하기 위하여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

\*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정밀한 금리대별 신용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

-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하여 점수 하락폭을 조정

\* 저축은행 이용고객 등급하락폭 조정 방안(예)

- 6%이하 대출 이용시 →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

- 6%~18%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→ 캐피탈·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평가

#### ✓ 기대효과

-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
\* 특히,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(18% 미만)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(약 0.9등급) 상승 (이중 21만명은 등급 상승 예상)

② 중도금·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업권차등을 폐지(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)

#### ✓ 기대효과

- 중도금대출자 19만명,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 예상 (이중 각각 7.7만명, 5.9만명은 등급 상승 예상)

## 2 신용등급제 → 점수제로 전환

□ **(현황)** 현행 개인신용평가는 등급(1~10등급)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

\* 한 등급에 300~1,000만명이 넘는 개인이 밀집  
(예 : 4등급 633만명, 5등급 703만명, 6등급 515만명 등)

□ **(개선)** 해외 사례(美, 獨 등) 등 감안,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

○ 다만,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

\* '18년 하반기중 대형시중은행부터 시범실시 → '19년 이후 전금융권으로 확대

### ✓ 기대효과

-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(600-664점)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 받게 되지만,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
-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%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

## 3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

□ **(현황)** 평가 고도화 및 금융이력 부족자(Thin Filer) 불이익 해소 등을 위해 비금융정보 활용이 중요

○ 다만, 현행 비금융정보는 연체·체납정보 등 부정적 정보 위주\*로 활용되고 있어 오히려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

\* 세금·사회보험료의 경우 체납정보는 일괄적으로 자동 등록·활용

\* 개인이 사회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제공하면 평가상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, 개인이 직접 제공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활용도는 미미(약 4.2만명 활용)

○ 비금융정보의 활용기준도 비체계적\*이라 소비자 혼란 야기

\* CB사는 계약관계에 있는 일부 리스·렌탈업체 등 상거래 회사로부터 고객의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평가에 활용 →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



[참고] 금융이력 부족자 현황 (NICE 기준)

- (정의) 최근 2년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자
- (규모) 전체 4,515만명 중 1,107만명이 해당
  - 20대 청년층(330만명), 60대이상 고령층(350만명)이 높은 비중
- (평가) 대부분 4~6등급으로 평가(약 953만명)

(만명, %)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 이상	합계
전체 등급보유자	864.1	829.5	921.0	887.3	1,012.7	4,514.7
금융이력부족자	329.8	126.3	136.7	165.6	348.9	1,107.2
4~6등급	298.0	106.3	107.5	127.3	313.9	952.9

□ (개선)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고, 긍정적 · 부정적 정보의 균형 활용을 유도

- 활용정보\* 및 가점 폭 확대\*\* 등을 통해 현행 긍정적 공공 정보 가점제도의 활용을 활성화

\* (현행) 사회보험료 · 공공요금 · 통신비 납부실적

(개선)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 및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확대

\*\* 우량정보 등록시 가점폭 확대(ex. 현행 5~17점 → 최대 50점)

※ 체납정보 외에 세금 ·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일괄 수집하여 평가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

-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을 강화\*하고 연체정보 외에 성실 납부실적, 장기 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

\* (현행) 3개월, 10만원 이상 연체 → (개선) 3개월, 50만원 이상

- 금융/비금융정보를 분리하여,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정보만을 활용한 독자적 신용점수(예: 통신스코어) 도입도 추진

cf) 미국 FICO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위험 측정모형을 개발('15.4월)하여 약 15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점수를 산출

## [2] 평가체계의 공정성 강화

◆ 연체 등 부정적 정보의 활용기준을 합리화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불이익을 완화

### 1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

□ (현황) 금융채무를 연체한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단기/장기 연체로 등록되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

\* 단기연체 : 10만원 & 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,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 
장기연체 : 50만원 & 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, 상환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

○ 그간의 기준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, 연체 등록기준이 낮아 실수 등에 의한 일시적 소액연체시에도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

\* 단기연체는 '11.10월, 금액기준(10만원이상) 신설된 바 있으며, 장기연체는 '05.11월, 금액기준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강화

□ (개선) 경제환경 변화, 해외사례 등 감안, 연체기준 상향 조정

○ (단기연체) 10만원 & 5영업일 이상 → 30만원 & 30일\* 이상

\* 미국, 영국 등 주요국의 단기연체 등록기준이 30일임을 감안

- 연체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(이력)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

\* 연체 중 타은행의 신규대출 발급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 등 감안

○ (장기연체) 50만원 & 3개월이상 → 100만원 & 3개월 이상

#### ✓ 기대효과

- 전체 단기연체 등록자 123.8만명중 약 6.3만명이 연체등록 해제로 신용점수가 상승('17.12월말 기준)

- 전체 장기연체 등록자 94.3만명 중 약 6.4만명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('17.12월말 기준)

## 2 단기연체·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

- **(현황)** 연체를 상환한 이후, 단기연체·상거래연체는 3년간 그 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
  - 일시적 소액 연체인 단기연체 및 개인의 합리적 예측·관리가 어려운 상거래 연체\*에 대해서 정보활용이 과도하다는 비판
- \* CB사가 개별적 계약으로 정보를 수집·활용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활용되는 정보의 범위, 수준 등을 예상·관리하는데에 한계
- **(개선)**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축소(3년→1년)하고, 상거래 연체의 경우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
  - 다만, 단기연체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(3년)을 유지

### ✓ 기대효과

- 약 116.5만명이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 대상에 해당하여 신용점수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

## 3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

- **(현황)** 채권자 신청시 법원은 연체차주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며 동 명부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금융권에 공유
  - 장기연체정보의 과도한 활용을 제한하는 현행 신용정보법 규정\*에도 불구하고, 기한의 제한없이 연체정보를 공유
- \* 연체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연체를 미상환한 경우에도 연체정보를 해제하여 금융권 공유를 제한
- **(개선)** 금융회사의 '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' 활용 자제 유도\*
  - \* 현재 은행권은 명부 등재 신청 자제를 자율결의 → 전업권 확산 유도
  - 보다 근본적으로, 민사집행법령 등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등과 협의 추진

### 【3】평가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

- ◆ 평가지표 및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점수의 예측·관리가능성을 제고하여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 지원

#### 1 평가지표 공개 확대

- (현황) 현재 CB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평가의 주요 평가항목 및 평균적인 반영 비율을 공시
- 공개되는 평가항목이 부족하고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 일반 소비자가 구체적인 점수변동 요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
- (개선) CB사의 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전달체계 구축
- 소비자군별(일반고객군/연체이력군)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을 상세하게 공개하고, 설명도 추가

< 현 행 >		< 개 선(예시) >			
평가영역	반영비중	영역	주요 평가요소	일반 고객군	연체 이력군
상환이력정보	28%	상환 이력 정보	연체 건수	-	-
* (설명) 현재 연체 보유 여부 및 과거 채무상환 이력			- 90일 이상 연체 건수	--	---
			- 단기 연체 건수	-	--
			연체 기간	-	---
			연체 상환 정보	+	++
			연체 상환후 경과일수	++	++
			비중	35%	50%
		* (설명) 단기연체의 기준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며, 장기연체는 신용정보원 및 신용 정보사 채무불이행 등재 또는 90일 이상 CB연체 등재를 기준			

## 2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

- (현황) 현재 CB사는 개인에게 연간 총 3회 무료로 본인의 신용 점수 및 점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평가항목을 제공중
  - 다만,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개인이 점수변동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신용관리를 해 나가기에는 부족
- (개선) 본인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

### < A고객의 점수산정사유 조회결과(예시) >

긍정적 요인	부정적 요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체 경력이 없습니다.</li> <li>최근 한도대출(마이뉴스대출) 잔액 비중이 낮습니다.</li> <li>최근 신용카드 이용수준이 적정합니다.</li> <li>최근 1년내 신용카드 신용판매(일시불+월부) 이용 활발</li> <li>신용여력(가처분소득) 수준이 적정합니다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출 경력이 있습니다.</li> <li>비은행업권 대출을 보유한 경력이 있습니다.</li> <li>최근 1년 내 단기카드대출을 이용한 경력이 있습니다.</li> <li>현재 대출이 많습니다.</li> <li>현재 비은행업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</li> </ul>

- 본인의 신용점수 변화를 보다 편리하게 예측·관리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\*(가칭 “내신용계산기”) 서비스도 제공

\* 현재 CB사에서 유료 고객에 한해 제공 중으로 CB사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연 3회(신용등급 무료조회시 함께 제공(1회당 1일)) 등으로 사용기간 제한

### < 시뮬레이터 화면(예시) >

**카드관리**

•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입력원로

현재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이용잔액 0만원을  만원으로 변경합니다. 수정

• 카드이용 잔액 입력원로

현재 신용카드 이용잔액 74만원을  만원으로 변경합니다. 수정

⇒

**신용등급 종합분석 결과**

현재등급 (2017-03)	예상등급 (2018-03)	예상결과	변화폭
1등급	3등급	하락	71%

예상 잔액 효과: -1,500,000 원

고객님은 현재 1등급으로, 1년 내 3등급으로 2등급 하락할 확률이 71%입니다.  
 고객님의 등급이 3등급으로 바뀔 때, 1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1,500,000원의 연간 대출이자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 
 이로 인해 대출이자율 상승, 대출계열 및 카드 발급 가능성 하락이 예상됩니다.  
 대출/카드와 등급의 관계를 확인하시려면, 대출한상권과 또는 카드한상권리를 이용해보세요.

- ◆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상시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

### 3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

- (현황) CB사 평가에 대한 외부 검증시스템이 미비하고,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
  - (개선)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
    - 평가모형,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채널을 마련
- ※ [참고사례]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관련 객관성,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교수, 변호사, 연구원 등 외부정책위원 5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운영<sup>(13)</sup>

#### < 신용평가위원회 운영방안(안) >

- (구성) 학계, 금융분야 전문가, 변호사,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
- (논의과제) 평가 기초정보 공정성 및 타당성,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및 안정성, 신용교육 등 소비자 지원방안 등
- (활용) 위원회는 논의 결과보고서를 외부 공개하고 CB사 및 감독원에 제출  
⇒ CB사는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평가모형에 반영

### 4 CB사 자체검증 내실화

- (현황)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CB사 자체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나, 아직까지 자체검증의 실효성 및 투명성은 부족
- (개선) CB사 평가결과 보고서 발표(“연간신용보고서”)
  - 개인신용평가 추이, 점수 변동율, 점수대별 연체율 등을 포함한 상세현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평가모형의 검증자료로 활용

## 【4】소비자 권리보호 강화

◆ 주요 정보에 대한 고객 통지 강화 및 이의제기권 도입 등  
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

### 1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

- **(현황)**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발생 등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실 등에 대한 고객통지·설명이 미흡
- **(개선)** 단기·장기연체사실 발생시 연체정보의 등록 전에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 통지토록 의무화(「신용정보법」 개정)
  - \* 현재 단기연체에 대해서는 연체등록 전 해당고객에게 통지토록 행정지도
  - 대출이용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을 의무화

### 2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

- **(현황)** 본인 신용점수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이 제한적으로만 인정\*
  - \* (i)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하여, (ii)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 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
- **(개선)**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요구·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
  - 모든 개인에게 금융회사·CB사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
  - 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, 정보 정정 청구 외에 신용점수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



## IV.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

- 금번 방안으로 개인신용평가체계가 한단계 고도화되고, 우리 금융 시스템의 포용성과 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
  - 그동안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권에 포용되지 못해왔던 다수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
  - 중금리 대출 등 차주별 위험수준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
  - 합리적인 신용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,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
- 향후,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할 계획
  - 빅데이터 활성화, 신용정보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불이익 완화 노력을 지속
    - 특히, 사회보험료·세금 납부실적 등 다양한 비금융 공공 정보를 공유·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의를 추진
  - 진입규제 정비 등 신용정보산업을 경쟁적으로 재편하여 다양한 평가모형이 개발될 수 있는 산업적 여건을 마련
  - 본인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‘본인신용정보 관리업’을 도입하는 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도 충분히 보장

⇒ '18.2월중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정보 활용여건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



## V. 추진일정

□ 대부분 방안은 금년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

○ 금년중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

추진 과제		추진일정
1. 평가의 정확성	①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차등완화	‘18년 하반기중 시행
	② 신용등급제 → 점수제로 전환	‘18년 하반기 대형사 시범실시 ‘19년부터 전업권 확대
	③ 비금융정보 활용방식 개선	‘18.2/4분기중 시행 * 비금융 독자 신용점수 도입은 CB사와 추후 협의
2. 평가의 공정성	① 연체정보 등록기준 강화	‘18년 하반기중 시행
	② 단기연체·상거래 연체 이력정보 활용 제한	
	③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	
3. 평가의 책임성, 투명성	① 평가지표 공개 확대	‘18.2/4분기중 시행
	② 본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세설명 제공	‘18.2/4분기중 시행
	③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	‘18년중 설치
	④ CB사 자체검증 내실화	‘18년 신용보고서부터 발간
4. 소비자 보호	① 중요사실 통지의무 등 강화	‘18.7월부터 행정지도로 우선시행 ‘18년중 신정법개정 추진
	②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	